

지역 정책 : 어떻게 해야하나 ?

2012. 9.



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
위원장 홍 철



목 차

I

대한민국, 健康한가 ?

II

수도권 집중, 解消되고 있는가 ?

III

지방보통시민의 幸福한 삶, 어떻게 ?

IV

4대강,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?

V

지역정책, 누가 主人인가 ?

VI

지방재정, 무엇이 問題인가 ?

VII

귀촌·귀농 活性化, 어떻게 해야하나 ?

VIII

지역발전, Control Tower가 있는가 ?



대한민국, 健康한가 ?

자랑스런 대한민국 ! 위대한 한국인 !

- 산업화 성공 : 88서울올림픽 개최
- 민 주 화 : 민주적 정 권 교 체

세계 7번째로 20-50 club 가입



반세기만에 이룩한 大한국인의 쾌거

※ 선진국 : 100~200년 소요

누가 主役을 했나 ?

- 1 (1995)
- (故) +
- 2 (2010)
- () :

지역적 : 수도권이 主役 ➡ 한강의 기적

30-50 클럽 진입을 위한 요건

● 6 : 5~14

*

/ / / / /

●

:

●

:



개방성, 창의성, 다양성



국가사회 전반 : 혁신요망

대한민국의 당면과제 : 3대 양극화 해소

(1) 빈-부격차



분배 (복지)

(2) 대기업-중소기업 격차



경제민주화

(3) 수도권-지방 격차



**지방분권
(지방살리기)**

※ 수도권 분산정책 : 한계

한국의 지역 : 무엇이 문제인가 ?

(1) OECD 최고의 수도권 집중국가 → 수도권권력

* 50%, 65%, 70%

(2) 대표적인 중앙집권국가 → 중앙권력



수도권권력  중앙권력

※ 지방 : 안보인다



수도권 집중, 解消되고 있는가 ?

개발년대의 지역정책 (60년대 ~ 80년대)

• 국가발전정책 → 지역발전

- , SOC
: 不在



• 수도권 집중 시작

- ('82) :

민주화 · 세계화 시대의 지역정책 (1990년대 이후)

- 민주화

-

, : 갈등 증폭

- 세계화

(IT, BT, NT)

-

:



진정한 지역발전정책 : 필요성 제기

참여정부의 지역정책 : 균형발전

-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

- , (10)

- 지역전략산업육성: 4

- 100 R&D

-

프랑스 : 지역정책 대전환

- '60년대 이후 수도권(파리)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
→ 파리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동시 저하
- 2000년대 : 지방분권 및 대도시권 육성정책
 - ('03) : '
 - -
 -
 - (Grand Paris) 11

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

- 5+2

:

-

-

:

-

- 30

:

, KT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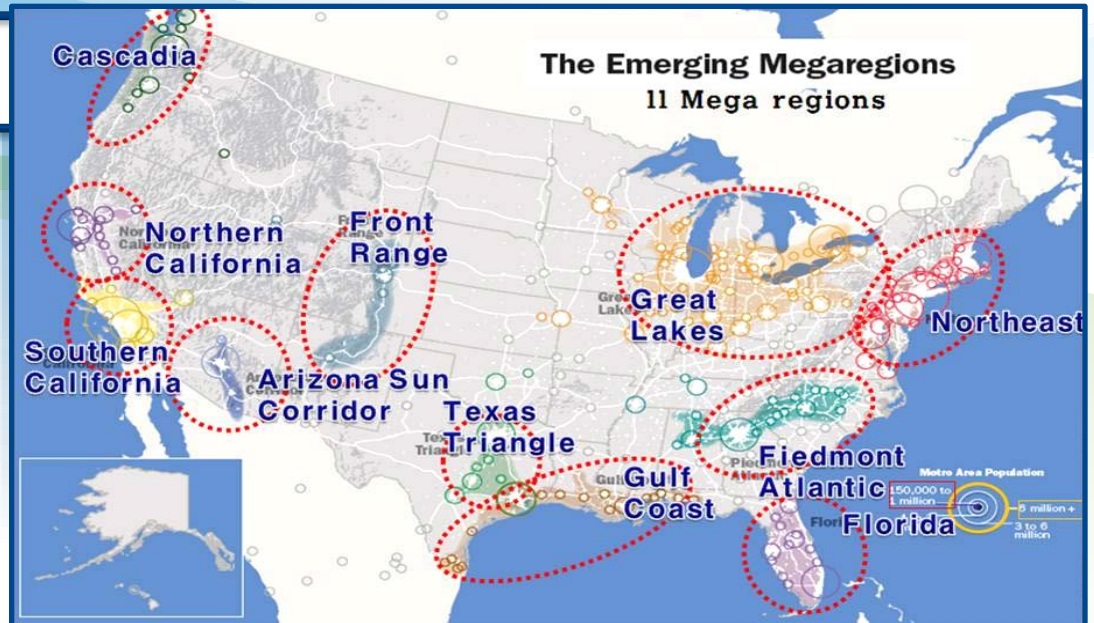
광역경제권 : 시작단계

➡ 지속적 정책추진이 요망

미국



- 국가 성장엔진으로
11개 광역경제권
(Mega Region) 구상
※ 고속철도로 연결



동북아



- 중국 3개 광역경제권 추진
- 일본 8개 광역지방계획권
→ 1개 초광역경제권으로
전환 도모
※ 신간선 : 581 km/h로 상향추진



수도권집중 : 심화·확산되고 있다



* : 60.3%('02) → 63.3%('10)
* : 49.0%('00) → 53.6%('09)



· :
- :
- : 2018
(SOC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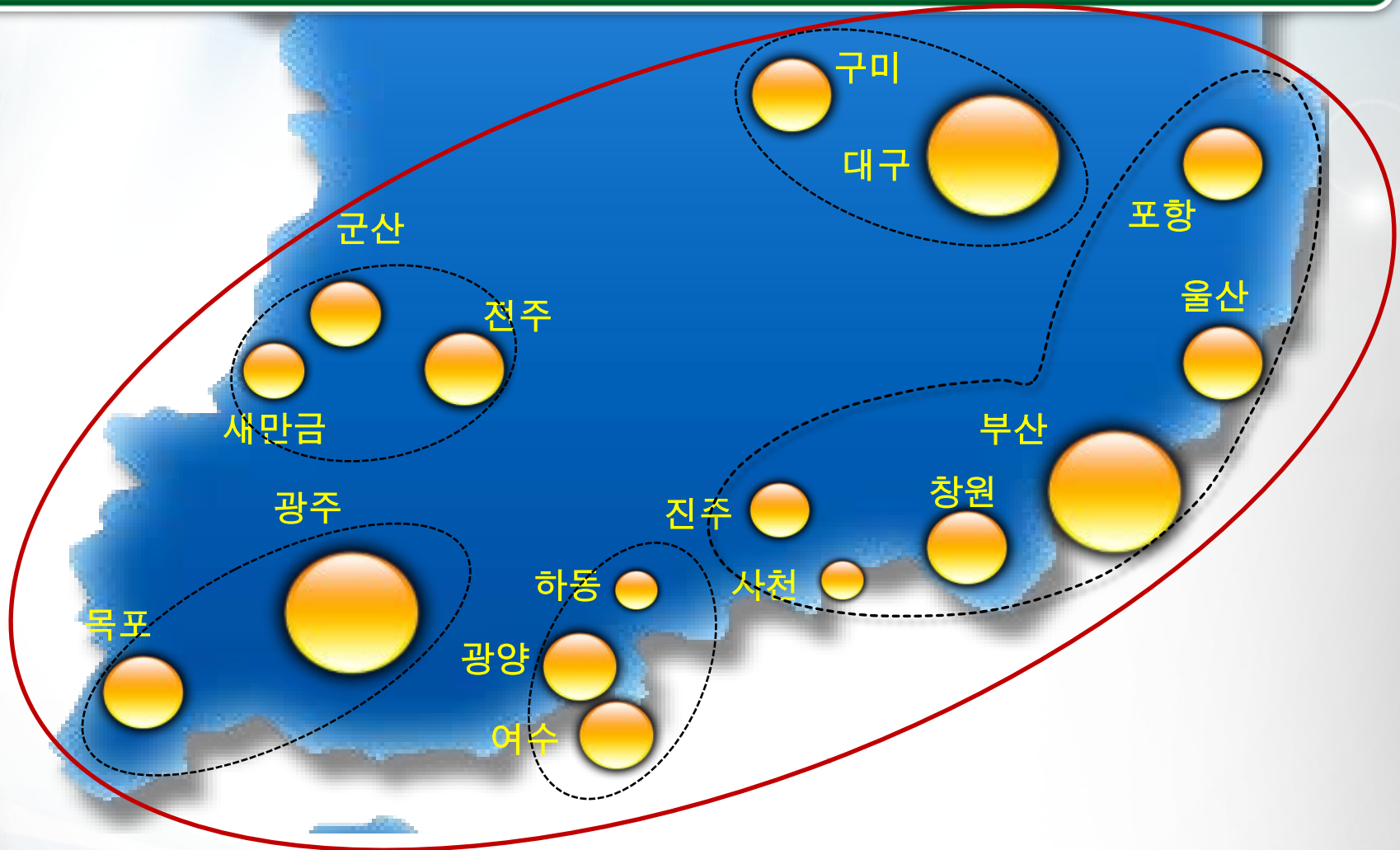
수도권 → 중부경제권으로 확산

중부경제권 : 10년내 구축 가능

세종시, 2018 평창동계올림픽 : 촉매제



남부경제권 : 소경제권 구축이 우선과제



3+1 광역경제권 → 한반도 경제권



통일 대한민국 :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



지방보통시민의 행복한 삶, 어떻게 ?

지방보통시민의 삶

- 개발년대 : 행복했다
 -
- 민주화시대 : 행복했다
 -
 - :
- 2000년대 : 행복한가 ?

2000년대 : 주요 지역사업들

- : , R&D
-
- . , KTX

SOC, Hardware 위주



지역주민의 '삶의 질' 개선과 거리가 멀다

지방보통시민의 소망 : 소박하다

- 품격을 갖춘 일자리
 - 3D
 -
 - 자녀 대학진학
- 살기 좋은 도시환경
 -
 -

지역정책방향 : 주민의 '삶의 질' 개선에 초점

오늘의 일자리 창출 : 최우선 과제

- :
● :
- /
- /

- **지역 주력 (및 특화) 산업 : 고부가가치화**
- R&D,

지방중소기업청, 지방고용노동청, 지자체, TP 등



통합적 운영 : 지방중소기업육성에 총력

지역 신산업 육성 : 중앙정부 주도

- : 力量(,) 不足

- R&D :

-

-

- :

지방교육 육성 : 지역발전의 초석



·

-

,

(:)



·

-



/

-

지역정책의 포커스 : 도시경쟁력 제고

- (. . .) :

- →

- () :

- 90%

- →

- , , SOC, , 別個



도시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

인근도시와 연계협력 : 도시권 육성



4대강,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?

물 문제 해결과 강 중심 국토 재창조



● 200

- , /

● 11.7

- / ,

●

- 1,281

,

●

-

,

지역의 삶과 문화를 위한 공간 창출

- : 16 36
- 234 (130)
- 1,757 : 31,218
-

작년 10월 개방이후 937만명 방문



()

4대강, 이제는 지역을 위해 활용하자



,



,

4

지자체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방안 강구
중앙은 지자체 전략에 대해 적극 뒷받침 해야





지역정책, 누가 주인인가 ?

지금까지의 지역정책 : 누가 主導 ?

- : , , 主演

- :

- : 助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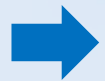
- ,

- : 主役

- : ,

主客이 전도된 지역정책
(권한: 중앙정부, 책임: 지자체)

앞으로의 지역정책 : 지자체 主人



()

(市・郡)

- 區

-

市・郡

道 :

- ()



道

지자체(市·郡) 주도의 지역발전 : 가능할까 ?



·

-

/

/

-

·



·

力量()

?

-

-

/

지방분권(재정분권), 지방역량 강화



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

지방분권 : 돈, 권한 ➡ 지자체(市·郡)

- 중앙공무원 : 생존의 문제
- 정치인 : 각종 국책사업 따오기 용이
- 지자체장 : 잘못하면 과심죄
- 지방공무원 : 권한 줘도 골치 아프다
- 시민단체 : 메아리 없는 외침

국회가 초당적 협력



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의 기치를 높이야 !



지방재정, 무엇이 問題인가 ?

지방재정 세입현황

- 국가예산(235조원, 2011년)

- : (80%), (20%)
- : (40%), (60%)

- 지방재정 세입구성* (141조원, 2011년)

- () : 38% (57%)
- : 24% (20%)
- : 38% (23%)

* 지방채와 조정교부금은 제외한 비율임/ 괄호내는 서울시 포함

지방재정 세출현황

- 경상경비 등 : 20%
- 지자체 자체사업 : 40%
- 국고보조사업(984개) 지출 : 40%(48조원)
 -
 - (30) + (18)

※ 지방교부세(27조원) 66%가 매칭펀드로 지출

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: 지자체예산 블랙홀

국고보조사업 목록(예시)

광특회계 지역계정 부처별(국토부, 농림부, 행안부)

포괄사업명 (주관부처)	실제 운용사례
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(국토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농촌마을종합개발 ▪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축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 ▪살고싶은 도시만들기(16개 사업)
일반농산어촌 개발 (농식품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농촌마을종합개발 ▪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축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
특수상황지역 개발 (행안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농촌마을종합개발 ▪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축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
성장촉진지역 개발 (국토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개축지구 지원

지방재정개편 : 세출부문(I)

- 주민의 '삶의 질' 개선에 우선

- ()

- . .

- (,)

- 지역역량 강화사업

-

-

지방재정개편 : 세출부문 (Ⅱ)

-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(984개) : 축소
 - ➡ 확보된 자원은 교부세율 인상에 활용
 - 복지 등 전국 공통사업 : 차등보조
 - 비공통사업 : 단계적 지방이관+교부세율 인상
 - 신규 국고보조 사업 : 최대한 억제



국고보조사업 : 축소·정비는 재정분권의 출발점

지방재정개편 : 세입부문

부동산 세수감소 및 복지비용증대 : 지방재정 보전필요

대안 I ▶ 지방소비세율 인상(현행:부가가치세의 5%)

- 수도권 편중 : 상생발전기금 ▶ 지역간 양극화 완화 한계

대안 II ▶ 지방교부세율 인상

- 낙후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 배분 유리

대안 II : 현실적 대안임

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 개편(I)

- 광특회계 현황

()

(R&D,)

- 지역계정 : 주민 삶의 질 관련 사업으로 전면개편

-

/

-

:

→

市·郡

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 개편 (Ⅱ)

- 광역계정 : 지역간 연계협력, 특화산업지원 위주로 재편
 - 국가 R&D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
 - 다양한 분야의 연계사업 발굴 추진
 - 중소기업 육성, 고용지원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



명칭개정 : 지역균형 및 지역활력증진 특별회계(가칭)

지방재정개편 종합

세 출

- 주민 삶의 질 개선
- 지방역량 강화 초점 : 인력개발, 특화사업지원
- 국고보조사업(984개) 축소

세 입

- 지방재정 보전 : 지방교부세율 인상



귀촌·귀농 活性化, 어떻게 해야하나?

귀촌 · 귀농 현상 : Trend化

- : (→)
- : (→)
- : (720)
- : (3040)

귀촌확산 : (' 01) 880세대 → (' 11) 1만 세대

“이들은 돈도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”



농촌(초고령사회) 공동화 방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

귀촌·귀농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



-

(1') :

-



:

-

:



-

(CB), :



농산어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에 기여



지역발전, Control Tower가 있는가 ?

중앙정부와 지자체 : 역할분담

- 중앙정부

- : Road Map
- SOC :
- :

- 지자체(광역시, 市·郡)

- .
-

지역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강화

- **현 행** :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
※ 지역발전위원회 : 단순 대통령 자문기구
- **문제점** : 부처간 **사업중복**, 지자체간 **갈등**



지경부(산업), 행안부(재정세제), 기재부(지역예산)

➡ **통합** : **총괄조정기관 신설요망**

* [대안 1] : 기획재정부 전담부서 신설

* [대안 2] :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로 전환

지역발전정책과 재정의 연계 강화

감사합니다



/대/통/령/직/속/

지역발전위원회